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SSUE PAPER
KWDI 이슈페이퍼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 권인숙 발행일 : 2019. 5. 15
May
2019

수행과제명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 방향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dimail.re.kr)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가족갈등 양상

초록

- 외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서는 성별 역할 분리 등 보수적인 성별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 돌봄 노동 등 가족생활의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여성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외국출신 아내의 취업, 사회활동 증가로 가사·돌봄 노동 분담 요구는 높아지나, 다문화가족의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여성이민자의 이중 부담은 가중되고 부부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1. 배경 및 문제점

젠더구조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가족원들 간에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등에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간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은 공백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흡했음.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내 영역에 국한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활성화되지 못함.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 활동 확대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변화 요구가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과제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임.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이와 관련된 가족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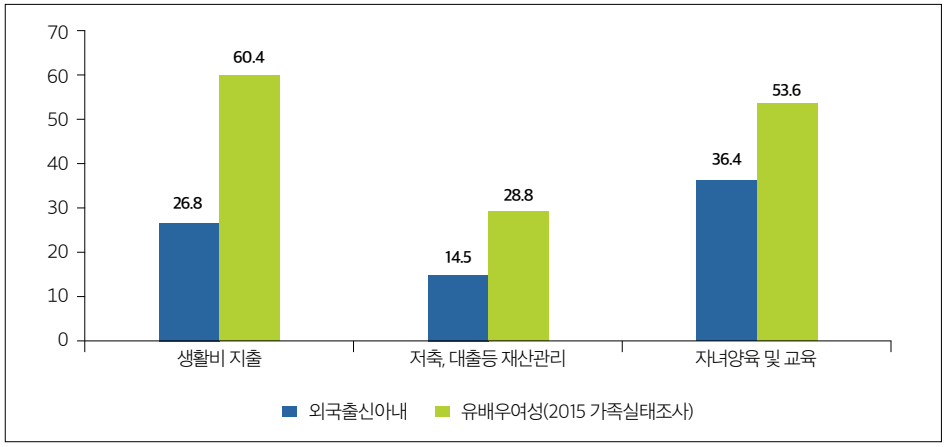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이선·최진희·황정미(2018).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조사 및 분석결과, 해외사례

여성이민자의 가족 내 위상: 가사·돌봄 부담의 집중과 제한된 의사결정권, 자녀교육영역에서의 주변화

▶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아내 500명과 들의 한국출신 남편 2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외국 출신 아내와 한국 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서는 성별 역할 분리 등 보수적인 성별 질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사, 돌봄 노동 등 가족생활의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여성의 권한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등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가족생활 사안별 '아내' 의사결정 비율(%)



▶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자녀교육 영역은 여성이 권한도 있고 부담도 지는 '여성의 영역'인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는 학교 등 가족 외부와 관계된 자녀교육에서는 부담도 적지만 권한도 적은 상황으로 다소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인터뷰 결과,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 노동 부담이 집중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의 경제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는 지속적인 취업을 통해 가구 경제에 기여하였고 가족들도 그 점을 인정하는 일부 여성이민자들은 상당한 권리를 발휘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경제권은 크게 제한된 실정임.

▶ 인터뷰에 응한 한국인 남편들 역시 불평등한 가족생활에 대한 아내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서, 부모님 앞에서는 집안일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변화에는 미온적임. 일부 남편은 '예전보다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말 안 하면 하지 않는' 식의 간헐적이고 비자발적인 행위일 뿐 일상에 뿌리내린 성 불평등 질서의 변화로 체감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가사나 아이 돌봄 분담에서는 다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반면, 경제권 문제에서는 변화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 남편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권의 소재가 '외국 출신 아내의 부족한 역량'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함. 경제권 이외에 자녀교육에서도 아내의 '부족한 역량'은 문제시되고 있으며, 외국 출신 아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앞서 제시한 '자녀교육에서 외국 출신 어머니의 주변적 위치'는 외국 출신 아내의 역량에 대한 남편의 낮은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외국 출신 아내들은 가족생활의 부담은 혼자 떠안고 있으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권한은 갖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도 자신의 부족한 역량으로 돌려지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여성이민자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 현실

▶ 젠더 질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은 가족생활 상 젠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됨.

▶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취업이 여성의 권한 측면에서는 불평등한 관계 개선에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나, 가내 역할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전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임.

<표 1> <외국출신 아내 취업 여부별 '아내' 의사결정 비율/ 가사·돌봄부담 아내 집중도 '상'비율(%)>

	'아내' 의사결정 비율				가사·돌봄 부담 아내집중도 '상' 비율		
	생활비 지출	저축·대출 등 재산관리	나의 부모지원	자녀양육·교육	가사부담	일상적 돌봄 부담	교육적 돌봄 부담
취업	30.7	18.3	33	36.1	47.4	53.8	21.8
미취업	20.6	8.8	17.8	37	44.3	67.2	15.2

▶ 가사·돌봄 부담과 취업의 필요성 사이에서 여성들은 아이 돌봄이 집중된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연기하더라도 가사와 돌봄 부담의 양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식으로 그나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안 없이 마련된 자구책만으로는 완벽한 일-돌봄 양립이 불가능하며 나름대로 정교하게 조직한 이중부담체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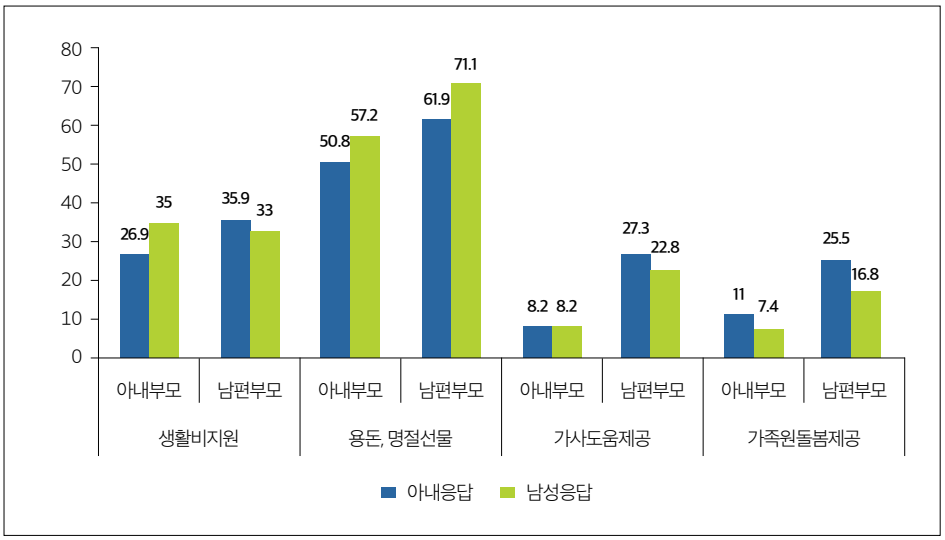
-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워킹맘' 여성이민자들은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돌봄을 우선시하라는 남편의 태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특히, 대도시 거주자, 전일제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 부담이 큼. 반면, 부부간 가사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일-가족 양립 부담은 낮아짐. 시부모가 아이 돌봄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거나 남편과 시가의 허락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된 이들은 일-돌봄 양립의 고비를 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일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국내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외국 출신 아내(403명)의 36.7%가 가사와 돌봄 부담으로 취업을 중단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이중부담으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음.

'친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불평등성

▶ 출신 가족과의 관계에 성 불평등 문제가 개입되는 바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임. 국제결혼 부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는 출신 국가에 있는 아내의 '친정'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친정'보다는 같이 살거나 바로 옆에 사는 '시댁'에 용돈이나 가사, 돌봄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친정'에는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가사나 돌봄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식으로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그림 2] 아내, 남편 부모에 대한 지원 제공* 비율(%)



*'주로 주고 있다' 응답 비율

▶ 국제결혼 부부의 출신 가족과의 관계는 다분히 불균형적이며 여성의 가사, 돌봄 역할이 외국에 있는 '친정'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도 '친정'을 경제적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는 것은 남편 출신 가족보다 아내 출신 가족에 현저히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외국 출신 아내의 '친정'은 더욱 부정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다층적인 불평등 문제의 단면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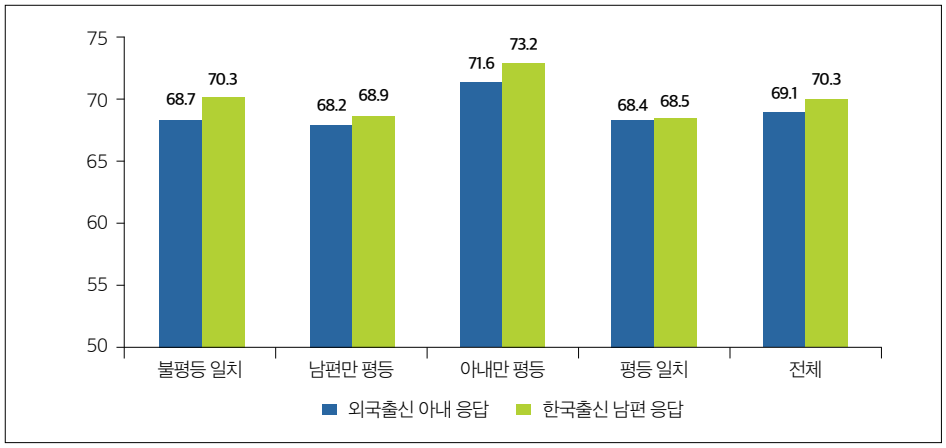
‘젠더 질서의 변화를 위한 협상의 시도와 ‘한국식’이라는 장벽

- 이번 연구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이민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부당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출신 문화의 정당함에 대한 확신으로 이들의 문제의식과 변화의 요구는 더욱 강력할 수 있음. 출신 사회에서 기대했던 가족생활과 비교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가사와 돌봄 부담을 지우고 경제생활이나 운전 등 삶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형성한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는 남편에게 가사와 아이 돌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젠더 질서 재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던 경험이 있음.
-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 대해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관심과 명백한 거절 또는 미온적 비협조뿐이었음. 더욱이,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로 그 질서가 ‘한국식’임을 강조하며 따를 것을 요구하는 시부모의 등장과 함께 부부간 젠더 협상을 겨냥한 시도는 시부모의 며느리 가르치기 국면으로 전환됨.
- 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요구하는 여성이민자들에게는 ‘한국식’을 앞세운 여성에 대한 제약과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동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것임.
-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족생활의 짐을 지우는 불평등한 가족생활이 ‘한국식’ 질서로 포장되어 한국어, 한국문화처럼 한국 생활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강요되는 상황에서 젠더 질서 변화를 위한 협상은 진전되지 못한 채 중단되는 경향이 짙음.

‘성 불평등 문제와 가족 갈등

- 가족원들의 일상을 구성하던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찾아가야 하는 젠더 협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음.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출신 아내와 한국출신 남편의 성역할 의식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부부간 의식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아내가 취업한 경우, 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부부간 의식 차이가 더 큰 상황임.
- 여성의 취업 및 사회 활동과 관련해 가사와 돌봄 분담,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의 변화 요구가 부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안을 조정해 가야 할 당사자들의 성 역할 의식 차이가 오히려 커진다면 원활한 조정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음. 이번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돌봄 부담을 많이 지는 집단에서 부부갈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 외국 출신 아내는 비교적 유연한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인 남편의 의식은 보수적인 ‘아내만 평등’형이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고 부부 갈등 경험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3]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별 부부갈등 경험 비율(%)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결과

▶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한 가족생활의 부담이 성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외국 출신 아내에게 전가되면서 가족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 결과에서는 여성의 본격적인 취업과 함께 이중부담이 심각해지는데도 가사와 돌봄 분담은 진전되지 않은 채 부부간 현실의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가족 갈등이 한층 심화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그 가능성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정책제언

정책 현황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접근 현황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서 성 평등한 가족생활이 정책 의제로 채택된 것처럼 보이나 막상 다문화가족에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점이 문제시되어 어떤 방향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실제 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대신 '안정적 가족생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임 .

▶ 성 불평등 문제는 가족관계와 미래 가족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에서는 이에 관한 의제가 구체화되지 못한 채 관련 정책이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성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만이 기본계획상의 과제로 제시되어 있을 뿐으로,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젠더구조에 대한 접근은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문제에 초점을 둔 '우편주문신부'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의 한계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한 정부의 유일한 조치는 201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3)임. 그런데 '성 평등' 영역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러 사업 가운데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성 평등' 영역은 프로그램 목적도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고 방향성도 구체화되지 못해 현장에서 일정한 방향성과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재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향성과 질적 수준은 센터의 담당자와 강사 등 현장 인력 개개인의 관심과 인식에 의존하는 구조이지만, 현장 인력들이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성 평등 의식과 성 인지력을 갖출 기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센터 인력의 이해 부족, 강사 활용 가능성의 제약,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 평등 의식 고취'와는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개선 내지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면 다문화가족의 요구도 높고 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와 교육 전반이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점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상담 등을 통해 몰성적(gender-blinded)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성 평등한 가족생활과는 모순된 메시지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음. 일례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육 교재의 내용은 여성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가사와 돌봄 등 가내 역할에 한정하고 시가와의 불평등한 관계의 질서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큼.

정책 제언

성 평등한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 수립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해소,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정책 과제, 세부 조치 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성 평등성 확보를 위한 현장 인력 역량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의 성 평등 의식, 성 인지력, 성 평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과정 개발, 시행
- 한국어 강사, 상담사 등 핵심 전달인력의 성 평등 의식,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점검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 ‘성 평등’ 영역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정립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전면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프로그램 전반의 성 평등성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향한 젠더 협상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이주여성 네트워크의 지지력 확대
  -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남편/아버지 프로그램 활성화
  -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향한 부부 참여 프로그램 개발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